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85
----------	-------

제출년월일 : 2024. 6. 27.

발 의 자 : 박은경, 송바우나, 김진숙
유재수, 황은화, 한명훈
박태순, 박은정 의원 (8인)

1. 주 문

-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였으나 정부는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의혹이 불거졌음.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함.

2. 제안이유

-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병대원들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투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 사고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부결됨.
- 채상병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검법이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예천군의 심각한 폭우로 인해 하천에 급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구역임에도 정부는 인근 군부대를 총동원하여 수색 활동을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며, 해병대 1사단 대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맨몸으로 수색 지원에 투입되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 24년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5월 28일 재의결이 최종 부결되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됐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젊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 비극적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정치적 논쟁과 입법 논의 속에서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2020년도에 제정된 「국방안전훈령」에 따르면,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실시할 경우 사전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사고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되었음에도 이를 정부가 또다시 외면한다면 국민적 공분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며,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24. 6. 2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